



이현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

## 대통령 당선인의 농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과제

### “농업인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연설

“여러분이 앞장서야 한국 농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농업에도 사람을 중심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FTA라는 큰 파도가 농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살아남을 사람도 있지만 걱정이 태산같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한나라당은 농가소득을 보조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9일 한농연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연설한 내용이다. 당선인은 “농가소득을 보조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농민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농정공약을 보아도, 농업계의 주문사항을 보아도 당선인의 농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농민 스스로 나서서 잘사는 농민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이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대책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하도록 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말에 농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농민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는 말도 겨우 수천 명의 잘나가는 농민들을 기준으로 ‘당신들

도 저 농민들처럼 스스로 길을 찾아라!’며 시장으로 내몰지 않을까를 걱정할지도 모른다.

### 농업인 스스로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한 농정의 방향은?

정부가 지원하고 주도하는 농업정책은 농업·농촌의 현장에서 그 효과가 기대한 만큼 발생되지 않는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수단에 비해 정책효과를 기다리는 전국의 농업·농촌 현장은 너무 넓고, 농민의 수는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불쏘시개로 젖은 옷을 말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것과 같다. 정책이라는 불쏘시개로 농민의 의욕이라는 장작을 불타오르게 하여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정책의 효과는 곧 사그라지고 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의욕을 회복하여 길을 스스로 찾아 나서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영세’ 농민터러 세계 최강의 기업농 및 농산물 수출기업과 맞서서 살아남는 길을 스스로 찾아 나서라고 하면 순순히 움직이겠는가?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농민들이 의욕을 회복하여 세계 최강 농업국의 기업농 및 농산물 수출기업과 맞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리더십과 전략이 필요하다. 농업관련 기관·단체들이 정부의 주도 아래 농민을 잘 살게 하고,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지금까지의 전략에서 농민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도록 정부와 농업관련 기관·단체들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수단이라는 불쏘시개로 농민들의 자조·자립·자율 정신이라는 장작이 불타오르도록 하고, 농업관련 기관·단체는 이를 뒷받침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농산물의 연구, 생산 및 가공, 판매·유통의 전체시스템이 생산 농민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최고의 기술로,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최고의 마케팅 역량을 발휘하여 소비자들의 사랑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 새정부 농정의 세부 실천 과제는?

농민들의 자조·자립·자율정신이 불타오르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새 정부의 농정에 대한 농민들, 특히, 농촌 오피니언 리더들의 관심과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채대책 등 가시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부채대책의 경우, 돈만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일반적인 부채경감 대책'이 아니라, 부채대책이 절실한 특별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부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기준과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탕감'도 하는 방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농민들 스스로 자조·자립·자율정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시군단위 또는 그 이상의 권역별로 품목별 공부모임(Study Group)을 결성하여 강의와 토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기술과 정보의 교류, 협동의 필요성 및 그 방법에 대한 토론 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해야 한다. Study Group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하되, 엄격한 사후 감독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민들이 스스로 길을 발견하고, 발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농업·농정관련 의사결정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잘 걸러진 농민들의 의견이 정부정책에는 물론 각종 농업기관·단체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반대로 결정된 정책이 농촌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당선인이 공약한 유럽의 농업회의소 체제는 우리의 현실에 맞춰 도입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농협, 시군 기술센터, 농촌공사 등의 운영도 지역 농민이 주도하도록 운영 시스템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넷째, 농민지도자와 농촌의 오피니언 리더에 대해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일정한 시간의 교육 이수자에게 Study Group의 지도자,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운영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 요원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민과 함께하는 농정을 펴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농민지도자로 하여금 자조·자립·자율정신에 바탕을 둔 새로운 농민운동을 강력히 펼쳐나가도록 촉구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회의도 해야 한다. 우리는 다같이 힘을 합쳐 기적을 만들어내야 한다.

#### 하나로 힘을 모아 개방의 파고에 대응해야

정부가 주도하고 농민은 끌려가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돈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을 결코 만들 수 없다. 정부와 농업관련기관·단체, 그리고 농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 개방의 파고에 대응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농업·농촌경제의 뿌리 경제주체인 농민들이 자조·자립·자율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새 정부의 농업정책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경영인 여러분들이 우리 농업의 희망이고 미래"라는 당선인의 말은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선인의 농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욕을 상실한' 농민들을 움직이게 하는 탁월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농민 지도자들의 신뢰와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